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음 4월 21일) 제15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통계청 전북지역 인구동향 조사결과... 출생자 '줄고' 사망자 '늘어'

# '인구 절벽' 현실화

### 올해 1분기 3600명 출생 · 3700명 사망 "생산 · 소비 감소로 경제위기 발생 우려"

전북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을 빠져 나가는 인구가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기존 인구의 사망자 수가 태어난 아이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북에선 3,600명이 출생하고 100명 더 많은 3,700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수) 출생자 수' 현상은 지난해 1~3월엔 강원·전남 2개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올해 전북이 추가되며 3개도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북의 출생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7.7% 줄어드는 등 골목길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점차 사라

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출생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인구 절벽' 사태가 강원과 전남에 이어 전북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전북권 인구는 속속 유출되고 있는 속절없는 기반속에 이 같은 상황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미루고 있다.

전북인구의 순이동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수치는 이미 오늘 내일이 아니다.

2001년 201만여명이던 전북인구는 3년 후인 2004년 191만6천명으로 서서히 줄어들더니 2005년 189만6,000명으로 180만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2007년 187만8,000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7년간 그나

마 유지해오던 187만명은 지난해 결국 186만9,711명으로 붕괴됐다.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9월과 11월,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은 월 100~800명이 전북을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의 집계를 보면 들어온 사람보다 3,600여 명이 더 많은 인구가 타지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 2만 여명을 포함해도 감소한 수치여서 도내 실제 상주 인구는 그 이하일 것이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결정된 전북 선거구 축소는 그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6년 생산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전북도 - 워싱턴주 교류 20주년 맞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6일(한국시간) 워싱턴 주청사에서 제이 인솔리 주지사와 공식면담을 가졌다. 전북도와 워싱턴주간의 교류 20주년을 맞아 교류협력 증진 협의회 체결을 통해 탄소복합소재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추진, 공무원 상호교환 및 민간 교류 협력 강화 등 교류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간 이해증진과 신뢰구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반지역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송 지사가 제이 주지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워싱턴 주청을 나서고 있다.

## "대통령 거부권 위한 輿 논리 '해피망측'"

###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국회법 개정안, 청문회 열고 있는 현실 반영한 것"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삼일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여당의 많은 학자들의 해피망측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문회와 굉장히 차이가 나서 상시청문회라고 하는데 이미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18대 7건, 19대 5건 개회한 사례가 있다"며 "사실상 소관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명시적으로 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관현안이 대단히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소관현안이란 것은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또 청문회 실시를 위해서 사실상 여야간에 합의를 거친 의결이 있는 후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께서 20대

들어 협치다. 여야간 야당 의견을 들겠다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거부권 행사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메르스, 세월호, 가슴살상군체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 "백남기사건 청문회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다룰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진상규명의 노력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대책 수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감찰은 이 사건에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안타깝게도 현재 백 농민은 대뇌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고 뇌 뿌리가 손상돼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반기문 "한반도갈등 해소 어떤방식으로든 기여"

### "北, 국제적 의무 준수해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갈등 등이 고조되면 동북아시아에 어둠이 깔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북한은 큰 위협을 표한 바 있고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부연했다.

반 총장은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실험이 올해 연초 실시됐고 유

엔 안보리에서는 2270 안보리결의 채택하고 제재를 강화했다"며 "이를 완전하게 시행했을 때 한반도 비핵화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북한 안보에 저해되고 북한 주민을 불행하게 한다"며 "북한의 군비는 아주 크지만 북 어린이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 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된다. 북한 당국은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에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싶다"며 "남북 관계 개선은 동북아평화를 영구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 ▶ 매일 INDEX

3면 반기문 대권 도전 '작심 발언' 이유    4면 차량털이 범죄 하루 1건 이상 발생    16면 부안 사회직업 바다의 향기

##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30명 미만(건설업 120억원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 가능(무상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의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대상은 고용부장관이 별도 정함)
-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보조금 추가 지원

### 일선기관 신청 및 문의

서울지역본부	02-6711-2842	전북지사	063-240-8534	경기동부지사	031-785-3314
서울북부지사	02-3783-8318	전북서부지사	063-460-3626	부천지사	032-680-6546
강원지사	033-815-1014	전남동부지사	061-689-4952	대구지역본부	053-609-0524
강원 동부지사	033-820-2513	전남지사	061-288-8705	대구서부지사	053-650-6837
부산지역본부	051-520-0527	제주지사	064-797-7504	경북동부지사	054-271-2036
울산지사	052-226-0526	충북지역본부	032-510-0518	경북지사	054-478-8016
경남지사	055-269-0562	경기지사	031-259-7128	대전지역본부	042-620-5615
경남동부지사	055-371-7524	경기북부지사	031-828-1915	충북지사	043-230-7123
광주지역본부	062-949-8745	경기서부지사	031-481-7518	충남지사	041-570-3428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7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hsa.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